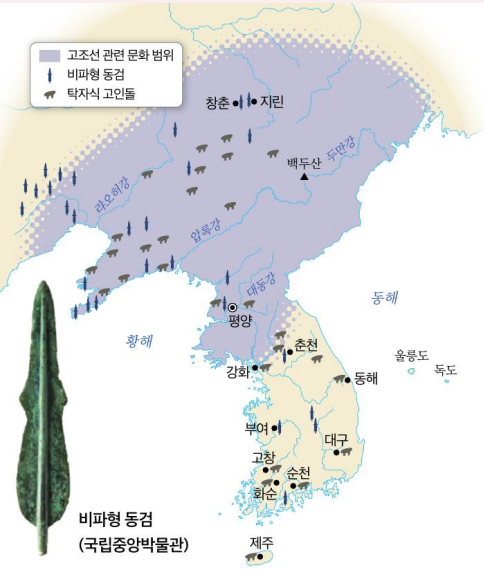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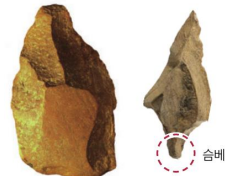


01. 선사 문화의 발달~국가의 성립과 발전

구석기★ - 약 70만년 전 - 편석기 - 주먹도끼, 짝개, 찌르개 - 사냥, 채집, 어로 - 이동 생활 - 동굴, 막집 - 공주 석장리, 연천 전곡리, 단양 수양개 유적, 제주 빌레못 동굴 - 후빙기 기온 상승 - 활 화살, 솜베 찌르개	신석기★ - 기원전 8000년 무렵 시작 - 간석기(농경 굴자구) - 기라바위, 뼈바늘(옷-그물) - 농경과 목축(신석기 혁명) - 정착 생활 - 이른 민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 움집(강가, 바닷가) - 씨족(혈연) 중심의 부족 사회 - 평등 사회 - 원시 신앙 - 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 - 양양 오산리, 서울 암사동, 부산 동삼동, 봉산 지탈리	청동기★ - 기원전 20세기 ~ 기원전 15세기(만주) - 기원전 10세기 이후(한반도) - 석기(살생할 도구), 청동기(무기-제기) - 발농사, 벼농사 등 농경의 확대 - 반달돌칼 - 불평등 사회 - 사유재산 - 계급 발생(고인돌) - 강화 부근리, 고창 화순 - 정복 전쟁 - 천손 사상	철기 - 기원전 5세기 - 철제 농기구 사용 - 농업생산력 증대, 인구 증가 - 정복 전쟁 활발	 ▲ 고조선 관련 문화 범위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출토된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 등의 유물·유적으로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주먹 도끼(좌, 경기 파주 출토)와 솜베 찌르개(우, 충북 단양 출토) 주먹 도끼는 한 손에 쥐고 도끼처럼 사용한 도구로, 다양한 용도로 쓰였다. 솜베 찌르개는 '솜베' 부분에 자루를 고정하여 창과 같은 도구로 사용하였다.		고조선 - 기원전 2333년 - 단군왕검(예정일치) -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 거친무늬 거울 - 위만 조선(기원전 194) - 철기 적극 수용 - 남부의 진·예와 한을 연결하는 중계 무역 번성 - 한 무제의 침략(우거왕) - 기원전 108년 멸망 - 한 4군(낙랑, 진번, 임둔, 현도) 설치 - 8조 법금		
부여 - 송화강 유역 평야 지대 - 왕 - 마가 우가-저가-구가 - 사출도★ - 영고(제천행사), 순장	고구려 - 압록강 중류 졸본 지방(산악 지형) - 5부(계루부, 절노부 등) - 제가 회의★ - 동맹(제천행사), 서육제	옥저 - 함경도 - 왕 無, 읍군·삼로 - 민머느리제 동예 - 강원도 북부 - 왕 無, 읍군·삼로 - 무천(제천행사) - 책화, 족외혼	삼한 - 한반도 중남부 - 마한의 목지국 '왕' - 변한 - 낙랑, 왜 → 철 수출 - 제정 분리 - 군장(신지, 읍차) - 제사장(천군) - 소도 주관 - 계절제	

05. 고려의 정치

고려의 성립과 후삼국의 통일

- 왕건(철원, 918)
- 송악 천도(송악 길지설, 919)
- 발해 멸망(926) → 유민 유입(934)
- 경순왕 투항 → 신라 멸망(935)
- 후백제 멸망(936)

태조(재위 918~943)★

- 호족 정책
 - 융합 : 혼인, 사성, 역분전 지급
 - 견제 : 기인, 사심관
- **훈요 10조★**
- 『장계』, 『계백료서』 반포
- 복진 정책(정전강 ~ 영흥만)
- 대가관 강경 정책(만부고 사건)

광종(재위 949~975)★

- 왕권 강화
 - 호족, 공신 세력 숙청
- **노비안감법(956)**
- **과거제(쌍기, 958)**
- 청제간원(광덕 준종)

성종(재위 981~997)

- 유교 정치 이념 채택
 - **최승로, 시무 28조★**
- 유교(차국의 도), 불교(수신의 도)
- 국자감 정비
- **12목 설치** → 지방관(목사) 파견

종양 행정 기구

- 2성 6부
 - 중서문하성(재신 : 낭사)
 - 상서성
 - ↳ 6부
 - 중추원(추밀 : 승선)
 - 재추회의(재신 + 추밀)
 - **도병마사★**
 - 식목도감
 - 어사대 : 감찰
 - 3사 : 회계

※ 대간

- 낭사 + 어사대
- 연론 담당

관리 등용

- 과거
 - 문과(제술과, 명경과)
 - 잡과(기술직)
 - 승과
 - 좌주 문생제
- 음서(蔭紱)
 - 공신, 5품 이상 관리의 자손
 - 과거 > 음서

문벌[門閥]

- 주요 관직 독점
- 왕실, 다른 문벌과의 혼인

지방 행정 기구

- 경기
 - 5도
 - 군, 현
 - **주현** : 지방관 파견
 - **속현** : 지방관 X, 향리가 통치
 - **양계(북계-동계)**
 - 진
 - **향, 부곡, 소**
 - 지방관 X
 - 과거 응시 제한, 거주 이전 자유 X, 세금 부담 多
- ※ 호족 → 향리



<태조 왕건의 통천관(通天冠)>

자료 2 「시무 2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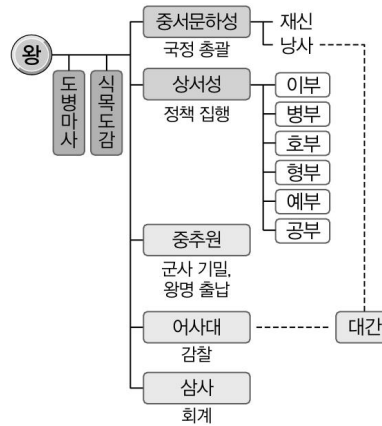
7조 왕이 백성을 다스린다고 하여 매일같이 그들을 살 퍼볼 수는 없습니다. 호족들이 늘 공격적인 업무를 핑계로 백성들을 괴롭혀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니, 지방관을 파견하시기를 바랍니다.

9조 간청하건대 관료들이 조회에서는 모두 중국과 신라의 제도에 의거하여 예복을 입도록 하고, 일반 백성들은 화려한 문양과 주름이 있는 고운 비단을 입을 수 없게 하고, 다만 굵은 명주로 만든 옷만 입게 하십시오.

13조 우리나라는 봄에 연등회를 열고 겨울에 팔관회를 개최하여 사람들을 동원하여 힘든 일을 많이 시키니, 원컨대 이를 대폭 줄여 백성의 수고를 덜어 주십시오.

14조 바라건대 임금께서는 몸가짐을 조심하시어 교만하지 말고, 신하를 대할 때에는 공손함을 생각하며, 혹시 죄 있는 자가 있더라도 죄의 경중을 모두 법대로만 논한다면 곧 태평성세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 『고려사』 「최승로 열전」



광종 7년(956) 쌍기는 사신 설문우를 따라 고려에 왔다가 병 때문에 머물렀다. 쌍기의 병이 낫자 (광종은) 그를 만나고 매우 흡족히 여겼다. 광종이 그의 재주를 아껴 후주 황제에게 관료로 삼겠다는 글을 올렸다. 광종은 쌍기를 고려의 관리로 발탁하였다. 광종 9년(958) 쌍기는 처음으로 과거 제도를 시행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마침내 자공거(知貢舉, 과거 시험관)가 되어 시(詩)·부(賦)·송(頌)·책(策)을 시험하여 (인재를 선발하고), 그 뒤로부터 여러 번 지공거가 되어 후학들의 학문을 권장하였다. 이로써 고려에서 학문을 숭상하는 기운이 처음으로 일어났다.

- 고려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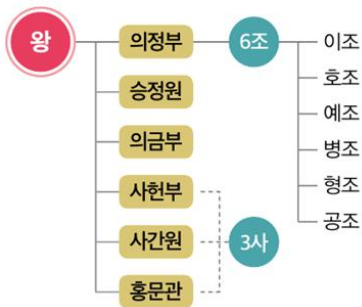
▲ 고려의 5도 양계

08. 조선의 정치

체제 정비★

태조	- 한양으로 천도, 경복궁 건설 - 정도전이 성리학적 통치 이념 확립에 기여
태종	6조 직계제를 실시하여 국왕 중심의 정치 강화, 사병을 혁파하여 군사권 장악 - 국가의 경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호패법 실시
세종	-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여 왕권과 신권의 조화 추구, 학문과 정책 연구를 위해 집현전 설치 - 여진을 정벌하고 4군 6진 지역을 개척하여 영토 확장
세조	6조 직계제 부활, 집현전을 없애고 경연 폐지, 직전법 실시
성종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하여 경연 활성화, 『경국대전』 반포

의정부에서 호패법을 의논하여 아뢰기를, “호패의 명령은 오는 10월 초1일에 영(令)을 내려 두루 알리고 11일부터 비로소 차례대로 만들어 지급하여 12월 초1일까지 지급하기를 끝마칩니다. 호패를 위조하는 자는 위조보조율(僞造寶鈔律)로써 논죄하며, 호패를 잃어버리는 자는 불응위율(不應爲律)에 의하여 태형을 집행하고 다시 지급하며, 호패를 함부로 두는 자도 불응위율로써 태형을 집행하되, 나이 70세 이상과 10세 이하는 논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하니 임금의 그대로 따랐다. - 『태종실록』 -



지방 통치 체제

- 전국 8도 : 관찰사 파견
- 군현 : 모든 군현에 지방관 파견(속현 소멸)
- 향리 : 지방의 행정 실무
- 유향소(留鄕所)
- 향촌 자치 기구, 수령 자문 향리의 비리 감시



▲ 조선의 8도

훈구파의 성장과 사림의 등장

- 훈구파
- 계유정난, 세조 즉위에 공헌
- 기록권 장악
- 사림파
- 성리학적 도덕 정치
- 향촌 질서 확립 추구
- 성종 때 중앙 정계 진출
- 3사, 공론 주도
- 훈구파 비판

사회(士福)의 발상

- 연산군
- 무오사화(조의제문, 1498)
- 갑자사화(1504)
- 중종반정(1506)
- 기묘사화(1519)
- 조광조의 급진적 개혁
- 현량과 시행, 향약 보급, 위훈 삭제
- 을사사화(1545)

붕당의 형성★

- 사림의 중앙 정계 장악
- 향촌 사회 장악
- 서원, 향약 기법
- 선조 때 주도권 장악
- 동서 분당(1575)
- 이조정랑 임명 문제, 외척 잔재 청산 문제
- 동인 : 신진 사림, 김효원
- 서인 : 기성 사림, 심의겸
- 광해군 : 복인 집권
- 인조반정 : 서인 집권(남인 공존)
- 공론 정치
- 차이 인정, 상호 토론과 비판

붕당 정치의 변질

- 비변사
- 국정 총괄
- 의정부와 6조의 유명무실화
- 예송논쟁(현종)
- 상복 기간을 둘러싼 예법 논쟁
- 서인(1차, 1659), 남인(2차, 1674) 승리
- 환국(換局)
- 숙종(재위 1674-1720)
- 서인, 남인 번갈아 집권
- 서인 분열 → 노론 / 소론
- 일당 전제화
- 3사
- 상대 붕당 비판, 기록권 유지로 변질

탕평 정치★

- 붕당 간 세력 균형, 왕권 강화
- 영조(재위 1724-1776)★
- 수취 체제 개편(균역법), 탕평파 육성
- 『속대전』(법전), 서원 정리, 신문고 부활
- 정조(재위 1776-1800)★
- 규장각 설치, 초계문신제, 장유영 설치
- 『대전통편』(법전), 신해통공, 서얼 차별 완화
- 수원 화성 축조

세도 정치(1800~18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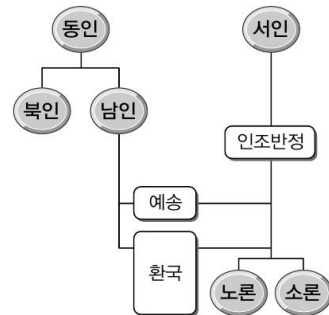
- 순조 ~ 헌종 ~ 철종
- 소수 외척 가문의 정권 독점
-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등
- 비변사 장악
- 공론 가능 상실
- 매관매직, 과거 부정
- 수령, 향리의 수탈 → 삼정의 문란

하층민의 붕기

- 비기, 예언 사상, 미륵신앙 유행
- 소극적 저항
- 벽서, 소청
- 적극적 저항
- 홍경래의 난(1811)
- 서북 지방민 차별, 세도 정권의 수탈
- 임술 농민 봉기(1862)
- 진주, 탐관오리의 학정
- 영남 안행사 박규수, 삼정아정청 설치★



교실 열기 삼강(三綱)은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부부간의 예를 말한다. 조선 시대에 편찬된 『삼강행실도』는 충신·효자·열녀의 모범이 되는 사례를 글과 그림으로 나타낸 책이다. 한글이 창제된 이후 왕실에서는 한문을 읽지 못하는 백성을 위해 『삼강행실도』를 한글로 번역하여 보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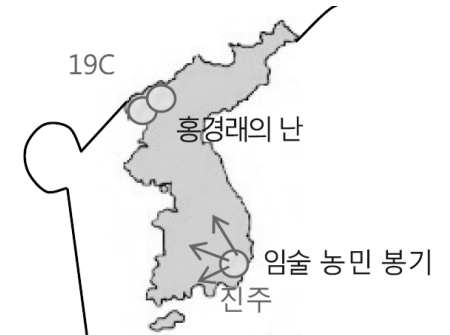


▲ 붕당 정치의 계보도

선조 대에 이르러 조정의 관리들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반목하였다. 당초에 다름을 조정하였지만 결국 서로 틀어져 버렸다. 마침내 기해년(1659)의 복제론(服制論)에서 크게 격화되었다. 갑인년(1674) 이래로 세상의 운수가 자주 번해 일진일퇴하며 배제하고 공격하는 기세를 조정하였고, 드디어 당시 일을 말아 다스리던 사람들로 하여금 피자를 논할 것이 각각 편당하는 풍습에 주력하게 만들었으니, 청남과 탁남, 노론과 소론에서 대개를 이루어 볼 수 있다. - 『숙종실록』 -

붕당의 폐단이 요즈음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처음에는 유학에 소란을 일으키더니, 이제는 한쪽 사람을 모조리 역적으로 몰고 있다. 우리나라는 본래 치우쳐 있고 작아서 사람을 쓰는 방법 역시 넓지 못하는데, 요즈음에 이르러서는 그 사람을 임용하는 것이 모두 같은 붕당의 인사들만 등용하고자 한다. 한 조정 가운데서 공격을 일삼고 한집안에서 싸움만을 서로 계속하고 있으니, 이러면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되겠는가? 저 귀양을 간 사람들은 그 경중을 참작하여 대신과 더불어 다시 살피도록 하고, 관리의 임용을 담당한 부서에서는 탕평하게 가두어 쓰도록 하라. - 『영조실록』 -

이제 만일 옛 제도를 복고하여 규장각을 대신하려 해도 행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고금을 참작하여 부득이 규장각을 따로 설치하게 된 것이다. 내가 본디 시문을 짓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즐기는 바릇이 있어, 매양 중요한 정무를 보던 중에 여유가 있으면 여러 신하들과 경사(經史)에 대해 토론하고 백성의 고통, 정치의 득실 등에 대해 뜻을 따라 섭렵하고 있으니, 실상 보필로 여기는 뜻이 있는 것이다. 내가 규장각을 건립한 뜻은 오직 여기에서 끝마치는 것이다. - 『정조실록』 -



17. 다양한 민족 운동의 전개

실력 양성 운동

물산 장려 운동★

- 배경 : 화사령 폐지,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움직임
- 전개 : 평양에서 조만식 등이 시작 → 조선물산장려회, 전국으로 확산
- 구호 :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
- 한계 : 수요 증가 등으로 토산물 가격 폭등 → 사회주의 계열의 비판

노동자에게는 이제 새삼스럽게 물산 장려를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들은 벌써 오랜 옛날부터 훌륭한 물산 장려 계급이다. 그들은 자본가 중산 계급이 양복이나 비단옷을 입는 대신 무명과 베포를 입었고, 저들 자본가가 위스키나 브랜디나 정종을 마시는 대신 소주나 막걸리를 먹지 않았는가? 실상 저들 자본가 중산 계급은 애국적이라는 의미에서 외화(外貨) 배척을 말하는 것이며, 그 이전에는 외래의 경제적 정복 계급을 축출하여 새로운 착취 계급으로 자신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려는 것이다. — 동아일보 —

민립 대학 설립 운동★

- 배경 : 제2차 조선 교육령(1922)
- 목적 : 한국인의 힘으로 고등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인재 육성
- 전개 : 이상재,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 조직 → **전국적인 모금 운동(한 민족 일천만, 한 사람이 일원씩)**

조선 안에는 한 개의 대학교도 설립하지 못하여 대학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인도할 곳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손실이 크고 많은 것은 누구든지 짐작하는 바이다. 이에 일반에서는 항상 유감으로 생각하던 바이지만 대학을 세운다는 일은 극히 거창하여 이번에 조선 각지의 뜻을 모아 민족적 운동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의 힘을 합하여 민립 대학 한 곳을 세워 보고자 민립 대학 기성 준비회를 조직하고 집행 위원을 선정하였는데 — 동아일보(1922. 11. 30.) —

문맹 퇴치 운동(1929~1934)

- 목적 : 1920년대 후반부터 농민들을 대상으로 문자 보급과 민중 계몽을 도모
- 전개 : 문자 보급 운동(조선일보사 주도), 브나로드 운동(동아일보사 주도, 농촌 계몽 운동)



▲ 조선일보사가 발간한 「문자 보급 교재」 ▲ 브나로드 운동 포스터

민족 문화 수호 운동

조선어 학회★(조선어 연구회에서 확대 개편됨, 1931),

-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 우리말(조선말) 큰사전 편찬 사업 추진
- 조선어 학회 사건(1942)으로 타격

일제의 역사 왜곡 : 식민 사관(정체성론, 타율성론, 당파성론 등), 조선사 편수회 주도

민족주의 사학(한국사의 독자성과 주체성 및 민족정신 강조)

- 박은식★(1859~1925) : 국혼 중시,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저술
- 신채호★ : 『조선사연구초』, 『조선상고사』 저술
→ 정인보 등에게 계승(조선학 운동 전개)

사회 경제 사학

- 백남운 : 『조선 사회 경제사』,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인 발전 법칙에 따라 발전하였다고 주장

민세 운동

6·10 민세 운동(1926)★

- 전개 : 순종의 서거 이후 천도교와 사회주의 계열, 학생들이 인산일에 맞춰 시위 계획
- 영향 : 민족 협동 전선의 토대 마련, 동맹 휴학이 전개되는 등 항일 학생 운동 확산

순종 효황제 국장을 기회로 시내에서 발생한 중대 사건은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천도교 격문 사건, 권오설과 격문 사건, 학생 ○○ 민세 사건 등 세 가지로 이미 취조까지 마치고 일부분은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 이후 경기도 경찰부 고등과에서는 시내 모처에서 또 그와 같이 국장을 기회로 소란을 일으키고자 여러 가지 음모를 계획한 행적을 발견하고 활동하여 수일 전에 23명의 청년을 검거하고 방금 엄중 취조 중이리는데, 국장 당일에 과격 문서를 뿌리어 ○○ 운동을 일으키려다가 그와 같이 발각된 것이라 한다.

— 조선일보(1926. 6. 16.) —

광주 학생 항일 운동(1929)★

- 배경 : 학생들이 독서회 등을 결성하고 식민지 차별 교육 철폐 등을 요구하며 동맹 휴학 전개
- 발단 : 나주역에서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 발생
- 전개 : 경찰 등이 한국인 학생 탄압 → 민족 차별에 분노하여 대규모 시위 전개 → 전국으로 확산

1. 학생 : 대중이며 끝기하라! 우리의 슬로건 아래로! 피검자를 우리의 힘으로 탈환하라. 검속자를 즉시 석방하라. 교내의 경찰청 침입에 반대하라. 조선인 본위의 교육 제도를 확립하라. 식민지 노예 교육 제도를 철폐하라. 사회 과학 연구의 자유를 확보하라.
2. 조선 민중이며 끝기하라! 피검자를 탈환하라. 재향 군인단의 비상소집에 반대하라. 경계망을 즉시 철폐하라. 소방대 청년단을 즉시 해산하라. 광주 중학을 폐쇄하라. 집회 · 결사 · 출판의 자유를 획득하라.

민족 협동 전선 운동

신간회(1927~1931)★

- 배경 : 국내외에서 민족유일당 운동 전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자치론을 주장하는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을 비판하며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 모색
- 결성 및 활동

계기	사회주의 계열의 정우회가 민족주의 진영과의 연대를 주장하는 정우회 선언 발표
결성	• 과정 :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의 연합(1927) • 강령 : 정치적 · 경제적 각성 촉진, 공고한 단결, 기하주의 일체 부인 • 조직 : 4만여 명의 회원들 가진 대규모 단체로 성장
활동	• 순회 강연회 개최, 농민 · 노동 운동 등 사회 운동과 연계 •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당시 광주에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고 민중 대회 계획

신간회 조직 지회에서는 긴급 간사회를 열고 보통학교 생도 구타 사건을 토의하였는데 그 결의안은 다음과 같다. 심상 소학교 생도가 작당하여 보통학교 생도를 구타한 사건에 대하여 생명 절망이라는 의사의 진단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당국과 학부형회에서 하등의 진지한 성의가 보이지 않을 뿐더러 일본인 생도가 조선인 생도를 작당 구타한 사실은 도저히 거저 볼 수 없으므로 우선 양 학교에 문책하여 민익 문제로서의 적극적 전개를 기함.

— 동아일보(1928. 1. 30.) —

- 해소

배경	• 민중 대회 준비 중 지도부 체포 → 새로 구성된 지도부가 온건한 활동 방향 모색 • 코민테른의 방침 변화 : 계급 투쟁을 강조하여 민족 통일 전선에 부정적
과정	사회주의 세력이 신간회의 해소 주장 → 전체 대회에서 통과(1931)

※ 정우회 선언(1926. 11.)

우리 운동 자체가 경제적 투쟁에 국한되어 있던 과거의 한계에서 벗어나 한층 계급적이고 대중적이며 의식적인 정치적 형태로 비약해야 할 전환기에 도달한 것이다. 따라서 민족주의적 세력에 대해서는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질을 명백하게 인식하는 동시에 우리와 과정적 동맹을 맺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정하여, 그것이 타당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적극적으로 제휴하여 대중의 개량적인 이익을 위해서도 이전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분명히 싸워야 할 것이다.

— 조선일보 —

사회 운동

농민 운동

- 배경 : 토지 조사 사업과 산비 증식 계획으로 소작농 증가, 높은 소작료와 수리 조합비 부담으로 어려움 가중
→ 화전민, 도시 빈민(토막민), 해외 이주민 증가
- 전개 : 소작인 조합 등을 결성하여 소작료 인하와 소작권 이동 반대
- 압태도 소작 쟁의(1923~1924)
- 농민 운동의 변화

종래 조선의 농민 운동이 치열하였다고는 하나 무리한 소작권 이동과 높은 소작료 반대 등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그러나 1930년경부터 쟁의 형태가 차츰 전투적으로 변해 갔다. 그것은 이미 단순히 경작권 확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토지를 농민에게'와 같은 슬로건을 내걸고 농민 아학, 감습소 등을 개설하여 계급적 교육을 실시하고, 또 농민 조합의 조직도 크게 달라져 청년부, 부인부, 유년부 같은 부문 단체를 조직하여 지주에 대한 투쟁이 정치 투쟁화 하는 경향이 생겼다.

— 「조선 총독부 경무국 비밀 보고서」 —

노동 운동

- 배경 : 식민지 공업화에 따른 도시 노동자 증가 → 저임금, 장시간 노동, 민족 차별 등 열악한 노동 환경
- 전개 :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임금 인상, 노동 조건 개선 등 요구
- 원산 총파업(1929) : 석유 회사에서 벌어진 한국인 노동자 구타 사건을 계기로 발생

청년 운동

- 조선 청년 총동맹(1924) 등 각종 청년 단체 결성

소년 운동★

- 방정환이 주도한 천도교 소년회 중심, 어린이날 제정(1923)

여성 운동

- 여성 단체의 좌우합작으로 근우회 결성★(1927) → 순회 강연회 등 여성 계몽 활동 전개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 운동이 개시된 것은 또한 이미 오래이다. 그러나 회고하여 보면 과거의 조선 여성 운동은 분산되어 있었다. 그것에는 통일된 조직이 없었고 통일된 지도 정신도 없었고 통일된 항쟁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 운동은 효과를 충분히 내지 못하였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 지체를 위하여 우리 사회를 위하여 분투하려면 우리는 우선 조선 자매 단체의 역량을 공고히 단결하여야 한다.

우리 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여성에 대한 사회적·법률적인 일체의 차별 철폐
2. 일체의 봉건적인 관습과 미신 타파
3. 조혼 폐지 및 결혼의 자유
6. 부인 노동의 임금 차별 철폐 및 산전 산후 임금 지불
7. 부인 및 소년공(少年工)의 위험 노동 및 야근 폐지

형평 운동★

- 조선 형평사(진주에서 백정들이 결성, 1923) → 평등 사회 실현 추구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사람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인 칭호를 폐지하여, 교육을 장려하고 우리도 참다운 인간이 되고자 힘이 분사의 큰 뜻이다.



20. 통일 정책

박정희 정부 - 닉슨 독트린(1969) - 남북 적십자 회담(1971) - 7·4 남북 공동 성명(1972)★ -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전두환 정부 - 남북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1983) → 남북 이산가족 상봉(1985) 노태우 정부★ - 남북 고위급 회담(1990) -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1991)★ -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1991)★ - 최초 공식 합의, 서로의 체제 인정, 상호 불가침 합의, 잠정적 특수 관계 -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1991)	김대중 정부★ - 대북 유화 정책(햇볕 정책) - 금강산 해로 관광 시작(1998) - 제1차 남북 정상 회담(2000)★ - 6·15 남북 공동 선언★ -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 남측의 연합제 =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복원, 개성 공단 건설 추진	노무현 정부 - 금강산 관광(육로) - 개성 공단 운영 본격화(2004) - 제2차 남북 정상 회담(2007) - 10·4 남북 정상 선언 - 항구적 평화 -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문재인 정부 - 2018 판문점 정상 회담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핵 없는 한반도 실현)
7·4 남북 공동 성명(요약, 1972. 7. 4.) -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남북 기본 합의서(요약, 1991. 12. 13.) -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 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 교류, 합작 투자 등 경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6·15 남북 공동 선언(요약, 2000. 6. 15.) - 나라의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하였다. -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 경제 협력을 통해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등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요약, 2007. 10. 4.) 6·15 공동 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 현 정권 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종전 선언을 협력해 추진하기로 하였다. - 경제 협력 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 서해 평화 협력 특별 지대를 설치하여 공동 어로 구역과 평화 수역 설정, 민간 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 하구 공동 이용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 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 역사, 언어, 교육, 과학 기술, 문화 예술, 체육 등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요약, 2018. 4. 27.) - 공동 번영과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 우리 민족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다. 10·4 선언에서 합의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활용하기 위한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회담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다.